

광주 방직공장 통한 日 '위안부' 강제동원·유언비어 판결 첫 확인

일제 당시 노동·교통 중심지 광주, 위안부 취업사기로 대구 야마다 공장 사례 등 전국적 사안, 광주서도 확인 기반 약한 여성들 전쟁 공출 위기의식, 소문으로 확산 "실제 사실에 대한 조직적 통제 주먹... 후속 연구 절실"

현재까지 파악된 광주·전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상당수가 지역 방직·제사공장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광주가 전남지역 노동·교통의 중심지였던 탓에 일제가 이를 노려 취업을 미끼로 지역 여성들을 강제동원했다는 분석으로도 이어졌다. 일제가 '지역에서 처녀 또는 과부를 공출한다'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지역민을 처벌한 자료도 발굴, 주변 지역 사례와 엮이면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취업사기 이뤄진 광주지역 방직공장, 왜?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광주여성가족재단을 통해 광주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연구용역은 시 차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기획과 후속 연구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와 재단은 여성가족부와 국가기록원, 정의기억연대 등 기관과 기타 지자체·민간인 발행 증언집 등 자료들을 통해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현재까지 13명 파악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숨진 상태이고 고(故) 곽예남씨가 지난 2019년 숨져 광주·전남 마지막 생존자로 기록됐다.

특히 피해자 13명 중 4명(곽예남·진화순·최양순·최복애(가명))이 광주지역 방직·제사공장에서 취업사기로 일본군 '위안부'에 강제동원된 내용이 확인됐다. 이는 전국적인 사안이기도 했다. 대구

지역 피해자 고 김순악 할머니는 1943년 대구지역 방직 공장인 야마다 공장 직공으로 취업하기로 했다가 속아 일본군 '위안부'에 강제동원됐다. 취업사기로 연행된 김씨는 서울과 하얼빈, 내몽고를 거쳐 중국 북경까지 갔다가 1946년 귀국했다.

연구는 일제가 당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한 방직·제사공업이 발달한 곳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집단 동원했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일제는 호남 일대에서 광주가 비교적 일지리를 구하기 쉬운 대도시였던 점, 농촌 지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공장에 주로 취업한다는 점을 노렸다고 봤다.

◆지역 일본군 '위안부' 동원 유언비어 판결문, 7건 확인

광주지역에서 확인된 일본군 '위안부' 동원 유언비어 판결문은 1938년부터 1944년 사이 7건이 확인됐다. 혐의는 일본 육군 형법상 유언비어 유포 의율이 적용됐다. 1938년 9월28일 광주지법에서 금고 4월 형을 선고받은 김금례씨는 화순에 사는 과부 지인 김필순씨를 찾아 "요즘은 전쟁을 하고 있는 곳에 큰 건물을 지어 그곳에서 과부를 끌고 가 창녀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가 처벌받았다.

광주지법은 같은해 10월7일 임자근이씨와 송규녀씨에게도 금고 4개월 형을 선고했다. "최근 각지 주재소에서는 혼기에 있는 아가씨의 씨명, 연령 등을 조사하고 우리 육군이 출정해 있는 중국의 전쟁터에 수송해 병사의 위문, 취사 및 세탁물의 시중 등에 사역시키려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한 혐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하루 앞둔 13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에 꽃다발이 놓여져 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고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로 2018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뉴스시스

1941년 10월23일 날뽕밭이 업을 하던 김송죽 씨도 유언비어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집을 빌려 살던 정점례씨가 "최근 호구조사 하러 온 순사가 내 딸의 씨명과 연령을 상세히 조사해갔다"고 하자 김씨가 "조선총독부에서 일선 군대의 위안에 충당하기 위해 14세부터 18세까지의 조선인 처녀를 강제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딸을 숨기려"고 조언하자 처벌받았다.

연구를 이끈 포항한 '처녀 공출' 관련 소문을 유포하다 처벌된 이들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 전남 영암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한 유언비어 판결문 2건이 발굴된 만큼 일제가 실제 알려진 사실에 대한 조직적인 통제를 진행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국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여성들의 불안감이 담긴 유언비어는

튼소문이 아닌 사실이었다. 소문이 미치는 것까지도 법을 만들어서 통제, 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는 것은 실재한 내용에 대한 일제의 조직적인 입단속이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국가권력이 관여해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한 사례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방직공장을 중심으로 한 일제의 조직적 위안부 동원에 대한 후속 연구도 절실하다. 전남·일신방직공장 내 시민역사관 조성과 같은 사업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애를 녹여내 일본의 전쟁범죄를 다각도로 규탄하고 후대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를 이끈 이정선 조선대 교수도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집단 동원된 전남방직 공장, 여성들이 실려간 광주역, 남광주역 등 지역의 현존하는 공간을 일본군 '위안부'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과 역사는 그들이 살아온 지역의 기억과 서사, 그리고 지역적 정체성과 연계해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숙제를 남겼다. /전광훈 기자



80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곡동 흥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는 다모아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물총·비눗방울로 재현한 고려인마을의 '봉오동 전투' 흥범도 흉상 논란 종결... 고려인 "안도의 한숨"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지역민이 타국에서 고국의 해방을 바란던 동포들의 간절함이 한 세기를 넘어 후손들에 의해 재연됐다. 재외동포청과 광주 광산구는 15일 오전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 흥범도 장군이 이끈 봉오동 전투를 재현하며 자주독립 정신을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 역사를 이어가는 고려인마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 시민, 학생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1920년 6월 흥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일본군을 물리친 봉오동 전투를 재현했다.

독립군 역할을 맡은 참여자들은 과관색·붉은색 우비를 입고 양 손에는 총과 칼을 대신해 물총과 손 태극기, 태극 문양 우산 등을 들고 나아갔다.

당시 일본군 역할을 맡은 배우와 마주치자 물총을 쏘고 비눗방울을 날리는 분위기를 되살렸다.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흥범도 장군 흉상이 설치된 다모아어린이 공원에 모여 태극기를 연신 흔들며 만세 삼창을 외쳤다.

광복을 기원하며 공주머리를 던져 버린 박예선 '불멸의 영웅 흥범도', '대한 독립 만세' 등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펼쳐졌다.

기념 음악회에선 흥범도 장군과 태극 문양, 광복 80주년을 상징하는 드로잉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고려인마을어린이합창단과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독립운동과 민족정신을 기리는 노래, 메들리와 독립군가, 환희

의 송가 등도 선보여 의미를 더했다. 독립군 역할을 맡은 고등학생 오창호(19·여) 양은 "이런 행사를 처음 참여하게 됐다. 광복 80주년이라는 것이 가슴속에 와 닿고, 봉오동 전투를 재현해 보니 당시 긴박하고 치열했던 상황을 느낄 수 있었다. 무서움을 이겨내고 해방을 위해 힘 써주신 독립운동가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포래인 강지완 양도 "독립운동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짜릿했다. 봉오동 전투와 흥범도 장군을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됐다"고 이야기했다.

올해는 3년여 만에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흥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공사를 철거한 해로, 고려인 마을에는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됐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지난달 흥범도 장군의 잘못된 역사 왜곡이 바로잡혔다. 소식을 들은 고려인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흥범도 장군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로, 소련 극동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정부의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쫓겨가게 됐다. 이 시기에 고려인 동포들도 함께 강제이주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흥범도 장군을 포함한 독립운동가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대한민국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고려인은 뜻 깊은 행사에 꼭 함께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가 열린 고려인마을에는 러시아 연해주, 북간도 등지에서 일제 식민통치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인 고려인 7000명 모여 살고 있다.

/김준행 기자

광주·전남 경찰이 8·15광복절 전후로 잇따르는 이륜차(오토바이) 폭주족 등 집중 단속을 벌였으나 집단폭주는 없었다. 단속 과정에서는 음주운전 등 각종 법규 위반 240건이 적발됐다.

15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광주 이륜차 난폭 운전 다발 장소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사례 총 92건을 적발했다. 혐의 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중앙선 침

광주·전남, 광복절 집단폭주 없었다... 법규위반은 240건 음주운전 등 광주 92건·전남 148건 적발

범이나 신호위반 등 단순 법규 위반을 제외하면, 무면허 운전 1건과 전동 킥보드 음주·무면허 운전자 각각 2건을 검거했다.

미인중 등화(불법 구조 변경 등)가 대다수인 자동차관리법 위반 적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소음 허용 수치(이륜차 105dB·승용차 100dB)를 넘긴 굉음을 낸 운전

자 1명도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륜차 절도 사건도 1건 발생했다. 다만 주요 국가기념일 전후로 출몰하는 이륜차 집단 폭주·교통방해 행위는 없었다고 광주경찰청은 전했다.

전남경찰도 밤사이 주요 도심에서 대대적인 단속·검거 활동을 벌여 각종 법규 위

반 총 148건을 적발했다.

신호위반 등으로 단순 범칙금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138건이었다. 음주운전 9건과 무면허 운전 1건에 대해선 형사 입건했다. 오토바이 집단폭주는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우려했던 폭주 행위는 없었다. 광복절 연휴 기간 이륜차 난폭운전과 폭주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시민 안전 확보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